



尹정부 1년, 외교안보 정상화

# 한미·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2023. 5. 24.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패널

- | 좌장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방위 간사
- | 토론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신각수 前 외교부 차관, 前 주일대사  
이인배 통일교육원 원장

  
여의도연구원

---

## 尹정부 1년, 외교안보 정상화

# 한미 · 한일 · 한미일 연쇄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 □ 개요

- 주 제: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일 시: 2023년 5월 24일(수) 오전 10:00~11:5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재)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 참석자
  - 좌장: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방위 간사)
  - 토론: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신각수 前 외교부 차관, 前 주일대사  
이인배 통일교육원 원장

### □ 계획안

| 시간            |     | 일정                     |
|---------------|-----|------------------------|
| 10:00 ~ 10:05 | 5'  | ○ 개회 및 국민의례            |
| 10:05 ~ 10:20 | 15' | ○ 대표 인사말씀 및 내빈 소개      |
| 10:20 ~ 11:30 | 70' | ○ 토론회<br>- 좌담회 형식 자유토론 |
| 11:30 ~ 11:50 | 20' | ○ Q&A 및 종합토론           |
|               |     | ○ 폐회                   |

[尹정부 1년, 외교안보 정상화]  
한미 · 한일 · 한미일 연쇄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 토론

---

신 범 철

(국방부 차관)

##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 발표자료

### 1. 연쇄 정상회담 총평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담대한 구상’, ‘우리 인태전략’ 등을 발표하면서 쉽없이 노력해 왔고, 금번 G7 정상회의 계기 주요국들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외교·안보 정책방향의 기틀을 다졌다고 생각함.
- **(한미)** 한미동맹을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중심축으로 하면서 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지난 4월 ‘워싱턴선언’ 채택을 통하여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음.
- **(한일/한미일)** 일본과의 GSOMIA 정상화, 고위급 정책교류 재개 등을 통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음.
- **(인태)** 작년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 발표 이후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 동남아·태도국 등과의 맞춤형 협력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태전략 국방분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현재 유럽·중동·동남아 등 세계 각국이 한국에 주목하면서 외교·국방·방산 전분야에 걸친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금번 G7 정상회의 및 주요국들과의 정상회담도 그 결과물이라고 할 것임.
- 윤석열정부는 가치공유국과의 연대, 인태지역에서의 맞춤형 협력,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함.

## 2.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선언': 의미, 의의, 핵심내용

-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역대 최초의 선언문이며, 이는 한미가 함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 차원의 약속임.
- 여기에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기반 마련'과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그리고 △'핵전력의 상시배치 효과'라는 세 가지의 큰 의미를 담고 있음.
  - 양국 정상은 한미 확장억제 협력 심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 신설에 합의하여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이번 '워싱턴 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조치임.
  - 또한, 한미는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시작된 '53년 상호방위조약이 핵을 포함하는 상호방위 개념으로 진화하여 동맹의 핵·비핵전력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강화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임.
  - SSBN을 포함한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하여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美 확장억제력이 한국 보호를 위해 상시 운용되고 있음을 현시할 것임.

### 3.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 관련 국방부 입장

- 우리 軍과 주한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정보공유 등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의 연합 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한미는 다양한 탐지 및 요격자산 등 미사일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 등 실전적인 대응태세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능력과 태세의 강화는 굳건한 연합 미사일방어 태세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음.
- 나아가, 고도화되고 있는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협력 이외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및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은 중요한 협력임.
  - \*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활용, 미국을 경유 경보정보 공유
  -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것이며, 중러 등 제3국을 겨냥하지 않음.
  - 양자 및 다자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중국, 러시아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임.
-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수준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지속 식별·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尹정부 1년, 외교안보 정상화]  
한미·한일·한미일 연쇄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토론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정상회담 : 평가와 과제』 토론

2023.5.24.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유성옥

## 1. 윤석열 정부 1년간의 외교안보정책 평가

가. **총평** : 과거 파행의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완전 정상화시켜 온 1년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

※ 단기간 내 집중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효율적인 외교안보정책의 새로운 선례를 남김

나. **외교** :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편향 외교에서 자유·민주주의·인권 가치에 기반하면서 국익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외교정책 확립

⇒ ▲ 대미 : 한미동맹을 완전 복원·강화시켜 최고 수준의 한미관계 정립  
▲ 대일 : 한일관계의 회복·미래지향적 관계 설정 ▲ 대중/러: 국익을 고려하되, 자유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당당한 외교 전개

다. **국방 안보** :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체제를 구축하여 압도적 힘과 실질적 억지력에 기반한 안보정책 확립

⇒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3축 체제」를 확립하고, 「워싱턴 선언(2023.4)」을 통해 강력한 핵 억지력을 확보

라. **대북** : 북한 선의에만 기대는 굴종적 자세에서 벗어나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적극적 대북정책을 전개

⇒ 北 위협에 굴하지 않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개선을 강력 요구하면서도, 「담대한 구상」을 통해 핵포기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

## 2.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확장역지 측면)

가. ‘新 3축 (재래식 + 핵 + 사이버) 동맹 체제’ 구축 : 한미동맹이

① 기존의 재래식 동맹에서 ② 핵 동맹 ③사이버 동맹으로까지 확장

- 한미동맹이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핵 문제와 사이버 문제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발전
-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으로 재탄생

나. 실제적 힘을 가진 한미동맹 선언 : 강력한 응징력에 기반하여 즉각 행동이 가능한 한미동맹을 구축 →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ive Group) 신설/전략핵잠수함(SSBN: Ship Submersible Ballistic-missile Nuclear)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로 ‘핵 공유’에 준하는 확장역제 체제를 구축
-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 시 “일對일로 맺은 것이라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 더 실효성과 협력 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확장역제 개념이 문서로 정리된 첫 번째 사례”(4.28 하버드대 윤대통령 연설) 라는 데 의의
- 「워싱턴 선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역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고 명시 → 북핵 응징 수단으로 ‘핵포함’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도 큰 의미

다. 북한 심리전 무력화 계기 마련 : 북한의 대남/대미 심리전을 무력화시켜 상투적인 ‘핵 Bluffing 전략’ 차단 및 대북 逆 심리전 전개

- 북한 핵전략은 ▲ 실질적 핵 고도화와 함께 ▲ ‘핵공포 조장 심리전’을 통해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는(『손자병법』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고도의 심리전을 병행

☞ 김정은 : “철저한 전쟁억지력의 압도적 시위로 미제와 괴뢰들의 선택에 절망을 안기고, 군사동맹강화와 전쟁연습확대를 통해 잃을 것이 더 많으며, 더 큰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 것” (2023.3)/ “적들에게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 (2023.4)

○ ‘힘에는 힘으로, 심리전에는 심리전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기본 원칙을 남북관계에도 적용

-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가공할 대북 응징력/보복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 존립을 위해서도 핵무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 효과’ 거양

☞ 바이든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4.26)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end of regime)을 가져올 것”을 선언 → 김정은에게 핵고도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부여

※ 「워싱턴 선언」은 그간 김정은이 구사해 왔던 「핵 공갈 →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적 자세 → 나쁜 갑을관계(남한의 ‘핵 인질화’) 구축 → 북한의 남북관계 좌지우지」 전략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3.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 방향 : 억지력 강화와 지속적인 북한 비핵화 노력

가. 차질 없는 Action Plan 이행 : 「워싱턴 선언」이 ‘선언 차원’에만 머물지 않도록 핵 억지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만전 → 한미 간 확고한 의지와 실행력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

- 핵 억지력의 핵심인 ▲ 한미 NCG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회의의 정례화·내실화/가시적 합의/이행 ▲ SSBN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 특히, 오하이급 핵잠수함의 한반도 근해 전개장면을 공개하여 「워싱턴 선언」의 강력한 실행 의지를 과시하는 것이 요체

-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를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이행하여 同 선언 효과가 사실상 ‘핵공유’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

나. 적극적 對北/對中 메시지 발송 : 강력한 핵 억지력을 과시함으로써 북/중이 북핵문제와 관련한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도록 유도

○ 對北 : 막강한 대북 억지력을 입증해 보여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핵화 가능성을 견인

- 강력한 대북 억지력 시위 → 북한의 핵 공갈/위협에 대한 상쇄 (offset) 효과 → 북한의 핵 고도화 유혹에 제동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입구' 확보에 주력

○ 對中 : 중국의 위기의식과 책임론을 부각시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

- 중국에게 「북한의 핵고도화 → 워싱턴 선언을 통한 △ 한미 NCG 신설 △ SSBN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 중국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 → 동북아 긴장에 대한 중/북 책임론」을 각인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견인

☞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질주를 계속할 경우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 비등 → 일본/대만도 자체 핵무장 요구 → 동북아 핵 도미노 → 중국 안보에 치명적 결과 초래」의 시나리오를 주지

- 한편, 지나친 對中 적대시/비타협적 태도는 중국과 북한을 이격시키는 전략에 배치되므로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對中접근 노력이 필요

다. '플랜-B' 준비 :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질주가 더욱 속도를 낼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할 필요

○ 당면해서는 「워싱턴 선언」 정신(△ 한국의 NPT 성실 준수 △ 강력한 확장 억지력 확보)을 존중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에도 준비

○ 확고한 한미동맹체제를 바탕으로, 「워싱턴 선언」을 업그레이드 하는 가칭 「新 워싱턴 선언」을 준비

- ☞ 「新 워싱턴 선언(안)」 : ① 한반도 근해 美 전략자산 상시 배치(‘한국식 핵공유’ 추진) ② 일본(재처리시설 보유) 및 호주(핵잠수함 기술 확보) 수준의 핵잠재력 보유 추진 ③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미가 인식 공유)시에는 북한의 비핵화 時 까지 조건부로 한반도에 美 전술핵무기 재배치 ④ 한국정부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재천명

## 4. 향후 북한의 행보 및 대남 도발에 대한 대책

### (1) 「워싱턴 선언」 관련 북한 태도 평가

가. 표면적으로는 강력 반발 : 반발 속에서 대남 도발 구실을 모색

- 「워싱턴 선언」 직후 낮은 수준의 김여정 ‘입장문’(4.29)을 통해 통상적인 내용의 대남비난 입장을 표명

☞ 김여정 입장문(4.29) :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

☞ 중앙통신 논평(4.30) : “반공화국 핵전쟁 책동에 계속 매여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

나. 내부적으로는 당혹·위축 : 핵무기를 포함한 강력 대북응징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에 큰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의 당초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 북한은 윤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의 氣를 꺾기 위해 연이은 고강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남도발을 감행하였으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윤 대통령에게는 ‘김정은 방식’이 먹혀들지 않음을 인식했을 가능성

☞ 최근 △ 김정은의 일시적 잠행 △ 북한의 절제된 반발 수위 △ 「워싱턴 선언」 이후 5.24 현재까지 이렇다할 공식 입장 불 표명 등 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신들의 대남 압박 방식이 文 정부에는 통했으나, 尹 정부에게는 오히려 毒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고 판단

- 이에 따라 김정은은 한/미의 후속조치를 예의 주시하면서 「워싱턴 선언」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한 전략 수립에 고심할 것으로 전망

## (2) 향후 북한의 예상 태도

가. 신무기 개발/전략무기 고도화에 주력 : 당 8차 대회(2021.1)에서 김정은이 강조한 ‘5대 전략무기’ 개발에 주력하면서, 성능시험 시위를 통해 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② 대남/대미 압박을 지속

- 당면해서는 이른바 ‘전승절’(7.27) 계기 군사정찰위성을 시험 발사  
☞ 군사정찰위성 시험 발사와 관련한 김정은의 명령서를 이미 하달(5.17)
-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급 ICBM의 성능 고도화에 주력하면서, △ 오키나와/괌 주변을 겨냥한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 발사 △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상으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강행
- 우리 주요 지역을 상정하여 전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既 실시)하는 도발을 지속

나. 대남/대미 공포 조성 심리전 전개 : 핵 공중 폭발(기폭장치 실험)/ 방사능 해일 공격(2023. 3) 등과 같이 신무기의 성능을 과장하여 공개

- 「워싱턴 선언」 등 윤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한반도 핵전쟁 준비’ ‘동족 간 대결 조장 책동’ 등으로 비난하면서 우리 내부 남남갈등을 조성

다. 7차 핵실험은 최대한 자제 : 준비징후를 지속 노출시켜 한/미를 압박해 나가되, 실제 발사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 중국으로서는 내부적으로 그간 북한의 핵고도화 전략이 중국안보를 어렵게 만드는 「워싱턴 선언」을 가져왔다면서 ‘북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
- 북한으로서는 7차 핵실험 필요성은 있으나, 핵실험 강행으로 중국 입장을 더욱 곤란하게 할 경우 「북중 밀월관계 훼손 → 중국의 대북 지원에 제동 → 북한의 경제난/외교적 고립 심화」 상황을 우려

- 이에 따라 북한은 당분간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는 한편, 상황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7차 핵실험을 위한 최적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

☞ 다만,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장비·인력 동원 장면을 노출시켜 핵실험 징후를 조성

라. 행위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도발에 주력 : 한/미의 보복조치를 피해가면서 대남/대미 압박 효과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도발을 감행

- 우리 사회 혼란 조성을 위해 공공 안전망과 인프라(은행/언론기관/SNS/지하철/원전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및 해킹 시도

- 핵미사일 개발에 소요될 가상화폐 절취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

마. 직접 도발도 가능성도 불배제 : ‘북한주민 납치’를 주장하면서 서해 NLL 침범/군사분계선 총격 감행 등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국민 불안감 조성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

### (3) 우리의 대응 방향

가. 즉각 대북 응징체제 구축 : 군사안보측면에서 △ 대북 정찰감시체제 완비 △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형태에 대한 시나리오 별 대응체제를 사전 마련하고 △ 24시간 즉시 대응체제를 구비

나. 김정은에게 공포심 부여 : 「워싱턴 선언」이 ‘선언 차원’이 아닌 ‘실제적 행동’임을 보여주는 구체적 훈련 내용/미 전략자산의 전개 상황을 공개

- ‘김정은 참수작전’ 및 김정은 정권 붕괴를 가정한 한미 특수부대의 모의훈련을 상세히 공개하여 김정은 도발 행동 억제를 유도

다. 대북 심리전 강화 : ‘김정은체제 흔들기’를 위한 △ 적극적 대북정보 유입 △ 김정은의 ICC 제소 △ 북한인권문제의 국제공론화 등을 본격 추진

☞ 전방위 대북심리전을 통해 '김정은의 핵 고도화 전략은 북한의 안전보장은 커녕,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對北 압박만을 초래하여 체제 종말을 가져올 뿐'이라는 논지를 북한 내부로 확산 → '핵이 곧 국체' 라는 집단적 환상을 파괴

라. 북 가상화폐 해킹 차단 노력 배가 :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 경제제재 이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된 자금源인 가상화폐 탈취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처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

마. 대북 정보/정책 협력 강화 : 「워싱턴 선언」 정신에 기초하여 △ 북한 비핵화(대북제재 포함) △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 유도 △북한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한미 간 협력을 배가

#### (4)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이후 정책 과제

※ 전반적으로 현재의 기조와 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실을 만들어 내는 데 주력

##### 가. 외교 : 한국의 위상·역할에 부응하는 적극적 정책 전개

○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한국의 G-8 가입 성사 적극 추진

○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2025년) 계기 '제 2의 김대중-오부치'선언 ('윤석열-기시다 선언')채택으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 개막'을 선언

○ 적극적인 對中 외교 전개 : UN 안보리 제재 복원/북한 비핵화 동력 확보를 위해 중국을 한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선제적인 전략 필요

- 이를 위한 '4대 전략 방향'으로는 ① 확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여 ② 자유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③ 중국에 할 말은 당당히 하되 ④ 사안별로 중국과 긴밀 협력하는 실리외교를 전개

- 안보 위주의 對中외교가 國益외교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 안보와 국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스마트한 외교' 전략을 구사

☞ 최근 미중 간에 △ 美 번스 주중대사의 친강 외교부장(5.8)/왕원타오 상무부장(5.11) 접촉 △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전격 회동(5.10) △ 바이든 대통령은 G7 기자회견 시(5.21), “중국과의 관계가 조만간 해빙되기 시작할 것” 이라고 언급하는 등 미중관계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對中 스탠스도 ‘전략적 튜닝’ 을 검토할 필요

- 북핵 6자회담의 선제적 제안 → 성사 여부를 떠나 △ 북한 비핵화 이슈의 불씨를 살리면서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 거양
- 북한 인권문제 협의를 위한 별도의 국제회의 창설 제안 → 국제사회에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면서 △ 우리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부각

#### 나. 對北 : 우리 주도의 남북관계 설정

- 김정은 정권 압박을 위해 △ 북한 비핵화 △ 인권 문제 △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안
  - 이와 함께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및 국군포로 송환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
  - CVID를 목표로 우리 주도하에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여 북한에 제시
- ※ 다만, 조급하게 생각할 경우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한 한미공조 하에 긴 호흡으로 의연하고 신중하게 접근
-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 북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남북 간 보건협력을 제안

다. 대내 : 적극적 對 국민 소통 노력

- 북한 비핵화 및 인권문제 논의를 위한 범국회차원의 대책기구 발족
- 對 국민/언론 대상 외교안보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對국민 정보 서비스' 노력을 강화 //

[尹정부 1년, 외교안보 정상화]  
한미 · 한일 · 한미일 연쇄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토론

신 각 수

(前 외교부 차관, 前 주일대사)

##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 종합평가와 이행과제 점검

23.5.24(수), 신 각 수

### 1. 평가

#### 1.1. 한일 정상회담

- 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선제 조치가 대일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강제동원문제 교섭에서 얻을 전술적 이해보다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우리 전략 환경의 개선을 앞세운 전략적 결단이 주효
  - 일본 내에서 한국의 관계개선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일본도 호응해야 한다는 분위기 형성: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 요미우리 신문 등 보수층 반응도 긍정적
-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빠른 회복 조치를 평가
  - 대중전략상 중요 요소인 한일관계 개선을 크게 환영
  - 한일관계 개선은 한미일 협력체제 조기 복원의 기반을 제공
- 한일관계의 조기 회복과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
  - 한일관계의 '잃어버린 10년'을 빠른 속도로 탈피하여, 관계개선 궤도에 본격적으로 진입
  - 과거, 감정, 양자, 기성세대에서 미래, 이성, 다자, 청년세대로 중점 이동
  - 원 트랙에서 벗어나 투 트랙 본격화로 협력 여건 조성
- 절반의 출발로 나머지 절반을 채우고 여론 지지를 끌어올려야 할 부담 존재
  - 일본의 호응이 중요한데 아직 우리 기대 수준에 미흡
  - 피고 일본기업들의 반성·사죄와 자발적 기여 확보가 중요

#### 1.2. 한미 정상회담

-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동맹 강화와 비전 추구
  - 작년 바이든 방한으로 정상화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토대 마련
-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는 확장역지의 신뢰도 제고
  - 워싱턴선언으로 아시아 내에서

- 인도태평양 정책관련 상호조율과 협력을 통한 효과 거양
- 경제안보 관련 협력 체제 구축
  - 전략물자, 신기술, 핵심기술에 있어서 공급망 안전, 상호융통 등 추진
- 미국의 보호주의적 경향에 대한 우리 국익 확보
  - 반도체과학법, 인플레감축법 적용 과정에서 우리 업체 이익 확보
  - 양국 NSC 협조채널 구축은 상당한 의미
  - 시행령 발표 시점을 방미 이후로 설정하였으면 훨씬 부담 경감

### 1.3. 한미일 정상회담

- 빈번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3국협력 체제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22.11 캄보디아 3국 파트너십 정상선언의 구체화 단계 진입
-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악화에 대응할 강력한 협조체제 마련

### 1.4. 종합 평가

-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전환이 열매를 맺는 성과
- 한미동맹의 내실 있는 강화를 통해 우리의 어려워진 전략 환경 대처에 중요한 외교 수단을 확보
  - 미중 대립 상황에서 우리 외교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국익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과
- 한일관계 복원 과정의 본격화로 한미, 한미일 관계에 긍정적 효과 기대 가능
- 지각생인 인도태평양 이해당사국으로서 인태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 마련
- 외교성과에 비해 국내 평가가 낮은 것은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화와 소통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노력 필요
  - 한일관계 안정에 중요한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자세를 꾸준히 보여주는 게 중요

## 2. 이행 과제

### 2.1. 한일관계

- 강제동원 피해자 설득과 국민 마음을 다독이는 노력 강화

- ‘절반의 잔’으로 개문 발차한 해결책이니 만큼,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다독이는 노력 중요
-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실패가 이행 면에서 한일 상호노력이 부족한데 기인하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과제
-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언론에도 전략적 결단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 긴요
- 일본 정부의 적극 호응 유도
  - 국내 비판을 완화하는데 일본정부의 적극적 호응이 필수: G7 성공개최로 기시다 총리의 국내입지 강화는 선순환 기대
  -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결단을 평가하고 일본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
- 강제동원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
  - 사법부 계류 중인 1000여명 재판 결과 보상도 고려: 수백억 소요
  - 해결책이 대법원 판결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보완 필요
  - 소송이 어려운 피해자를 포함한 2000만원을 받은 피해자와 1억원 위자료 판결을 받은 피해자 간의 형평 문제 대두 가능성
  - 해결책에 반대하는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장기화할 가능성 우려
- 한일관계 개선의 전략적 이익을 조기 창출
  - 한미일 협력체제 복원에 의한 북핵 위협 차단
  - 인태정책 추진 한일 협력: CPTPP 조기 가입, 역내 소다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협조
  - 한일 경제협력 강화 및 제3국 공동 진출 활성화
  - 미중 격돌 완화 및 자유무역체제 유지에 한일 협력
  - 북핵 문제 해결과 억지 전략에 관한 한일 협조
  - 관계악화로 시행되지 않은 협력사업의 조기 가동
- 다른 현안의 선제대응
  - 한일 간 월별로 다양한 과거사관련 행사가 존재하여 관리에 어려움
  -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 사도광산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 등도 감정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
- 과거사 연구·교육 강화
  - 올바른 과거사 인식이 과거사 문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현안에 매몰되어 등한시한 상황
  - 역사공동위원회 재가동, 공동 역사교과서 제작 등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한류를 활용하여 소설·영화 형태로 자연스럽게 일본인의 과거사 인식을 개선
- 일본의 한국 내 정권교체에 의한 후퇴 우려 불식

- 일본 내에 진보 정권의 퇴행적 자세에 대한 불안 잔존
- 현 정부에서 한일관계를 탄탄히 해놓아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

## 2.2. 한미관계

- 경제안보
  - 공급망 탄력성 증진
  - 중국의 강압조치에 대한 경제판 NATO 추진 협력
- 인태전략 관련 협조체제 구축
- 워싱턴선언 이행 주도권 확보
  - 확장역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협의그룹(NCG)의 구성·권한·절차 등에서 우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주도권 발휘 중요
-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자국우선주의에 대한 대비 강화
- 중장기적 북핵 억지 방안 추구
  - 북한의 완전한 사실상 핵무장국가 달성에 대비
  - 전술핵 재배치, 잠재 핵능력 확보 등에 지속적 관심 필요
- 신기술분야 협조체제 구축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지원
  - 4차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 협조체제 조성
  - 반도체, 2차전지 등 우리 핵심 산업에서의 대중 경쟁력 우위 확보
- 우주·사이버 협력 강화

## 2.3. 한미일 관계

- 한미일 협력체제 구축에 있어서 우리의 창의적 접근
-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체제 구축에 선도적 역할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건 조성: 미국의 우선도 부여, 제재 이행 강화
-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3국 협조체제 활성화
- 인태 전략, 글로벌 이슈에서의 3자 협력 확대

## 2.4. 추가 사항

- 한중관계 관리 노력

- 의연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자극 회피: 메시지 관리 중요
- 대화와 소통을 긴밀히 하도록 노력하고 국익·원칙·가치를 종합 고려하여 대응
- 북한 도발 대비
  - 7차 핵실험, 군사위성 발사, 중장거리 미사일 실사 대응 체제 정비
  - 당분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북한의 대화 전환에도 대비해 놓을 필요
- 러시아와 소통
  - 러시아의 횡방에 대비한 소통 중요
  - 비살상 무기·물자 지원에 국한하는 것이 우리 상황에 최선의 방책
- 외교 인프라 정비: 예산·인력 보강 급선무
  - 인력 주요국 대비 1/3
  - 예산(정부 예산 중 0.48%)은 OECD평균 1.4%에 크게 미달

[尹정부 1년, 외교안보 정상화]  
한미·한일·한미일 연쇄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토론

이인배  
[통일교육원 원장]

# 평화결정권 회복의 1년, 한반도 평화구축전략의 시작

이인배(국립통일교육원장)

## I. 외교

### □ 평화결정권 상실의 시간

#### ○ 평화결정권이란?

- 평화결정권(Right of Peace-determination)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상태

#### ○ 한반도의 평화를 북한 김정은의 의지와 호의에만 의지함으로써 유약한 평화 상태, 불안한 평화 상태, 굴종적 평화상태

- 이마저도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14개월에 불과

### □ 회고 : 외교안보 7대 비정상 상황

#### 1. 文정부의 침묵 속에 핵무력 완성한 북한

#### ○ 2018년 4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평양특사 방문

-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발표, 트럼프 전(前) 대통령에게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보증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문재인]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문재인, 판문점 정상회담, 2018.4.27.)”

-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의 밀담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비핵화하기로 했으며, 미·북 정상회담을 적극 주선

#### ○ 북한은 2019년 12월 31일 「조선로동당」 7기 제5차 전원회의

- “미국이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 ○ ‘미상의 발사체’

## 2. 북한인권 개선 노력 회피

-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하여 2016년 3월 3일 제정, 동년 9월 4일 시행한 법률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제9조), ▲북한인권재단 설립(제10조),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기록물 발간(제13조) 미이행
-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으로 알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 남한 귀순 의사’ 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합동심문 조사 끝에 2019년 11월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나포 이틀 만에 판문점을 통해 강제복송 처리
- 미국 연방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021년 4월 개최한 한국인권 청문회에서 수잔 솔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2019년 11월 전 세계는 한국 당국이 두 명의 젊은 탈북 어민을 강제 복송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망명을 원했지만, 文정권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팔을 묶어서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런 행동은 독재체제를 이롭게 했으며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과 중국과 북한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했다” 라고 증언

## 3. 해수부 공무원 해상 피격사건

- 해수부 공무원 해상 피격사건(2020. 9. 23)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氏 피살사건 이후 두 번째로 발생한 인민군의 민간인 사살
  - 4·27판문점 선언과 후속 조치인 9·19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
  - 국방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 을 시도하다 벌어진 일로 왜곡

## 4. 2019년 6월 15일 ‘정박귀순’

- 정박귀순은 2019년 6월 9일 북한 선박이 함경북도 경성군 포구에서 출발,

NLL 북방지역에서 이틀간 위장 조업을 하고, 6월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 NLL을 통과, 6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 삼척항 방파제에 입항

- ‘경계 시스템의 문제’ 라기보다 文정부에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 군=적’ 이라는 기존 문구를 삭제하는 등 ‘정신적 경계 태세의 문제’

## 5.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폐지

-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구실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유예했던 文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과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조치” 명분
  - 매년 3월에 실시하던 전시대비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KR, Key Resolve)를 폐지하여 훈련 규모와 기간이 축소된 ‘동맹연습’ 으로 명칭을 변경
  - 매년 3월~4월 전시대비 증원 및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FE, Foal Eagle)은 완전히 폐지하여 대대급 이하 훈련으로 축소
  - 매년 8월 전시대비 정부 및 한미연합 군사 종합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lchi-Freedom Guardian, UFG) 폐지하여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하는 ‘을지태극연습’ 으로 대체

## 6. ‘대중 3不 약속’

-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0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면서 ▲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3국 간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2021년 3월 18일, 5년 만에 재개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이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unacceptable)”

## 7. 지소미아(GSOMIA) 연장문제 정치화

-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관련해 일본 신일철주금(신일본제

- 철)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명령
-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듬해 2019년 1월 2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1월 9일 일본은 배상 판결 관련 정부간 협의를 요청
- 2019년 일본은 8월 2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각 의에서 결정, 8월 7일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 하는 시행령을 공포
- 청와대는 8월 22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하여 8월 24일 연장 기간이 만료
- 11월 21일 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 11월 22일 일본 수출규제 해제를 전제하여 GSOMIA 종료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를 하고 조건부 연장

## II. 출범 1년간의 성과

### □ 평화결정권 회복의 기초작업 : 3중 축성

윤석열 정부 1년 주요 외교 일지

| 2022년                                     | 2023년                                      |
|---|--|
| 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                           | 1-15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                  |
| 5-2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             | 3-6 정부, 일제 강제동원(징용) 해법 발표                  |
| 5-2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 참석     | 3-16 윤 대통령 방일, 한일 정상회담                     |
| 6-29 스페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 4-26 국민 방미해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선언 발표              |
| 11-13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  | 4-27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
| 11-15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 5-7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한일 정상회담              |
| 12-28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 발표                  | 5-10 취임 1주년                                |
|   | 5-19 일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5-21 |

- 내성(內城) : 한미 동맹의 Upgrade - 핵동맹으로의 진화
- 워싱턴 선언(2023. 4. 27) : 핵협의그룹 설립
- \* NATO 핵공유정책의 2개 축
- 하드웨어 핵공유 : B-61 전술핵 폭탄이 서유럽 5개국에 이중기능전투기 (Dual Capable Aircraft: DCA)에 탑재 가능한 150~200개의 전술핵탄두

를 실전 배치(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2) 등 5개국 6개공군기지)

- 소프트웨어 핵공유 :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 나토 사무총장 주제하에 년 1회 개최, 해당국 국방장관이 참여(참가국은 28개국-1(불참 선언한 프랑스))

○ 중성(中城) : 인권 연대 - 미국, 유럽 국가들과의 북한인권 연대

○ 외성(外城): 민주주의 연대 - 민주주의 정상회의(2023. 3. 30)

### III. 양우 과제 : 한반도 평화구축전략 시동

○ 엘리슨의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전쟁이 회피된 사례 제시

- 16개 사례중, 4개 사례 언급(그중 1940-80년대 미국과 소련이 벌인 세계패권 사례 등)

○ 미국의 대중 전략(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의 새 경제적 리더십'(브루킹스 특강, 4. 27)

- De-coupling에서 De-risking으로
-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크(de-risking)과 다양화(diversifying)를 지지한다 "
- “우리 자체 역량 및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에 계속 투자할 것”
-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기술의 봉쇄가 아니다. 미국을 군사적으로 겨냥하여 도전하는 극히 세부적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것”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존스홉킨스대 강연, 4. 20) "미·중은 함께 살아가고 글로벌 번영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경쟁이 갈등에 가까운 것이 되지 않게 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국과의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한다”

○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 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여 가능성?